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경제적 손실가능성 점검

강유덕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장 (ydkang@kiep.go.kr, Tel: 3460-1123)

이현진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3460-1226)

차 례 ● ● ●

1.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EU-러시아의 갈등
2. EU-러시아의 경제관계
3. 경제적 손실가능성 점검
4. 향후 전망 및 국내 기업의 대응방향

주요 내용 ● ● ●

- ▶ 지난 수개월 동안 EU는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추진해왔음.
 - EU는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병합을 근린외교정책상의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경제제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4년 7월의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 이후 제재의 강도를 높였음.
 - EU는 지금까지 총 95명에 대한 입국금지, 23개 기업 또는 은행에 대한 거래금지,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맞서 러시아는 EU産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음.
- ▶ EU는 러시아의 제1의 수입국이며, 러시아도 EU의 제3의 수입국인바, 양측의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여 경제적 관계 단절 시 그 여파가 클 수밖에 없음.
 - EU는 총 천연가스 수요의 24%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産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의존도가 80~100%에 달함.
 - EU의 총수출 중 대러시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틱 국가들은 10% 이상,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3~6% 수준이며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도 3%를 상회하고 있는데, EU의 대러시아 수출은 2014년 2~5월의 기간 중 매월 전년대비 10% 이상의 하락을 기록 중임.
 -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가 무역금지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EU 경제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400억 유로와 50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을 겪을 것이며, 러시아 경제는 230억 유로와 750억 유로의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국내 기업의 해외활동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글로벌 공급사슬의 운영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러시아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함.
 - 국내에서 생산되어 EU에 수출된 제품이 러시아 수출을 위한 중간재로 사용될 경우, 그리고 EU産 부품을 국내에 수입, 조립가공 후 러시아에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 아울러 EU,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러시아 금융권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함.
- ▶ 한편 EU는 대체 에너지 확보 및 친환경사업 육성, 에너지 효율 강화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한편,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1.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EU-러시아의 갈등

■ 지난 수개월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 확대되어왔으며, 주변국인 EU와 미국이 대러시아 압박을 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음.

- 2013년 11월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Viktor F. Yanukovich)은 이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EU와의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중단할 것임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친서방 성향 인구의 비중이 높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정정불안이 본격화되었음.¹⁾
- 2010년 대통령에 취임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EU 편입 대신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협력체와 관세동맹 가입을 추진한바 있으며, EU와의 제휴협정 포기 이후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협정을 논의함.
- 2014년 2월 말 친서방 과도정부가 수립되자 러시아계 인구비중이 높은 크림 지역에서 과도정부에 반대하는 분리주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었으며, 3월 크림 자치공화국이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귀속을 결정함.
- 이 과정에서 미국과 EU를 주축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와의 갈등이 고조되었음.

■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을 전후하여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제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EU는 제재의 강도를 점차 높여왔음.

- 미국과 EU는 정치적으로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병합을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 강도 높게 비난하여 왔음.
-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과 이를 전후한 일련의 군사적 시위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EU는 역사적 선례,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과 함께 이 사태를 근린외교정책상의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음.
- EU는 러시아와 진행 중이던 비자면제협정 및 EU-러시아 협정(New Agreement)의 협상을 중단(2014년 3월 3일)할 것임을 밝힌 데 이어, 2014년 6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G8 정상회담의 준비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결정.
- EU는 2014년 3월 5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크림 자치공화국 및 러시아 인사에 대한 최초의 경제적 제재조치를 실시한 데 이어, 이후 점차 제재의 강도를 높여왔음.
- EU의 첫 번째 제재조치는 크림 자치공화국 내 친러시아계 인사에 대한 자산동결 및 크림 자치공화국에 대한 불인정 등 외교적 압박에 맞춰졌음.
-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2014년 7월 17일) 이후 제재의 강도를 높였으며, 지금까지 러시아 국적 인사를 포함하여 총 95명에 대한 입국금지 및 자산동결, 23개 은행에 대한 거래금지 조치를 실시하였음.
- 러시아 또한 대EU 에너지 수출가격을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EU産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양측의 긴장은 완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음.

1)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 및 추이에 대해서는 강부균(2014), 「최근 우크라이나 위기의 배경과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제14-02호를 참조할 것.

표 1.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EU와 미국의 경제제재

	주요 제재법안	주요 내용
EU	Council Regulation 208/2014 (3월 5일)	- 우크라이나 국가자금의 유용 및 인권위반에 관여한 인사 18인에 대한 자산 동결
	Council Regulation 269/2014 (3월 17일)	-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일성·주권·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인사(21명)에 대한 자산동결
	Council Regulation 284/2014 (3월 21일)	- Regulation 269/2014에 명시된 리스트에 12인을 추가적으로 제재
	Council Regulation 692/2014 (6월 23일)	- 크림과 세바스토폴(Sevastopol)에 대한 수입금지(크림 자치공화국에 대한 불 인정), 리비아와 시리아에 대한 추가적 제재
	Council Regulation 825/2014 (7월 30일)	- 크림 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EU 내 수입을 금지 - 교통 및 정보통신, 에너지, 석유가스, 광물자원 채굴 분야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금지 - 상기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장비 수출은 사전허가를 거쳐야 하며, 동 분야와 관련된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제공 금지
	Council Regulation 833/2014 (7월 31일)	- EU 회원국 개인이나 기업은 러시아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은행(상업은행, 개발은행 및 해외 자회사)들이 발행한 만기 90일 이상인 채권이나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없음. ※ 5대 제재 대상은행: 스베르방크(러시아 1위 상업은행), 대외무역은행(VTB, 2위), 가스프롬뱅크, 국영 대외경제개발은행(VEB), 로셀크호즈뱅크 - 30개 품목(HS 6~8단위 기준)의 대러시아 판매 시 EU 회원국 관계기관의 허가 의무화(주로 석유, 가스 채굴장비의 관련 부품) - 상기 품목이 심해석유와 북극원유 채굴 및 생산, 셰일오일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될 경우 판매를 불허함. - 군수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전자제품 등 이중용도 품목(Dual Use Goods)의 러시아 수출이 제한되며, 이 물품에 대한 기술적 지원, 중개, 금융지원 금지 - EU의 일반무기 리스트에 있는 군사관련 물품의 경우 대러시아 수출과 수입 금지 - 상기의 조치는 8월 1일 이후 신규 계약만 제재 대상이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수출이 진행될 수 있음.
미국	Executive Order 13660 (3월 6일)	- 우크라이나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일부 인사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 -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Viktor Yanukovich)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인 4명을 미국의 요주 인물 명단(SDNs: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에 포함시킬 것
	Executive Order 13661 (3월 17일)	- 러시아 정부관계자 7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미국입국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 동결 - 미국 기업들이 지정된 개인들과 경제거래를 하는 것 금지
	Executive Order 13662 (3월 20일)	- 재무부 장관에게 금융 서비스, 에너지, 광업, 엔지니어링, 군사 등의 산업분야에서 지정된 개인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같은 날 美재부무의 해외자산통제실(OFAC :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20명의 개인과 1개의 은행(Bank Rossiya)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

자료: 각 법안의 내용 및 언론보도 자료를 통한 저자 작성.

■ EU는 러시아의 제1의 수입국이며, 러시아도 EU의 제3의 수입국인바, 양측의 경제적 관계는 매우 밀접하여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관계 단절 시 그 여파가 클 수밖에 없음.

- 본고에서는 EU-러시아 간의 경제적 관계를 점검함으로써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EU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상해보고자 하며, 국내기업의 대응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함.²⁾

2. EU-러시아의 경제관계

가. EU-러시아 간 무역관계

■ 러시아는 EU의 제3위 교역국으로, 2013년 양측의 무역규모(상품)는 3,263억 유로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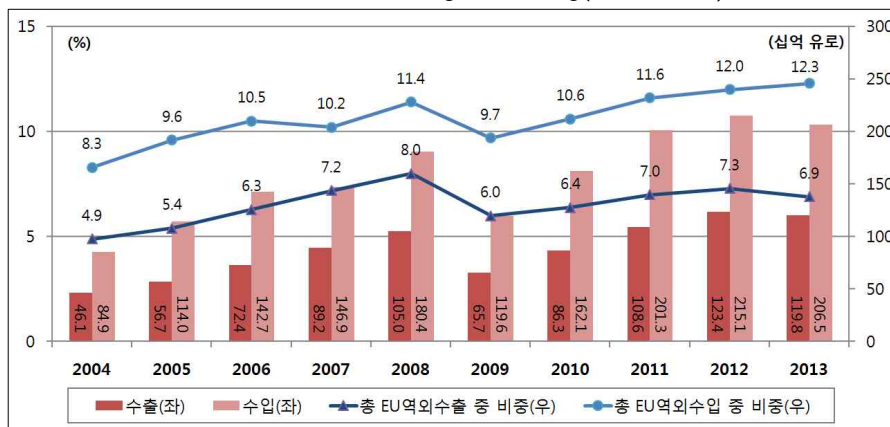
- 2013년 EU의 대러시아 수출은 EU의 총 역외수출 중 6.9%인 1,198억 유로(4위)이며, 수입은 총 역외수입의 12.3%인 2,065억 유로(2위)를 기록함.

※ EU의 주요수출국(총수출 중 비중): 미국(16.6%), 스위스(9.8%), 중국(8.5%), **러시아(6.9%)**

※ EU의 주요수입국(총수입 중 비중): 중국(16.6%), **러시아(12.3%)**, 미국(11.6%), 스위스(5.6%)

- EU와 러시아 간 상품무역은 2008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10년 동안 급락한 바 있으나, 2012년에 최고치(3,385억 유로)를 갱신하는 등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EU의 대러시아 상품무역 현황(2004~13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4. 04),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Russia," p. 4.

■ 한편 양자간 무역규모가 확대될수록 EU의 대러시아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총수입 중 원유 및 가스 등 에너지 관련 수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데 기인함.

- EU의 대러시아 무역은 수출보다 수입이 2배 가까이 많은 적자구조이며, 양자간의 무역규모 증가와 함께 적자 규모도 증가추세를 보여왔음.

※ EU의 대러시아 무역수지 적자추이(단위: 1억 유로): 388.0(2004년) → 702.9(2006년) → 754.8(2008년) → 757.7(2010년) → 917.2(2012년)

2)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민지영(2014), 「우크라이나 위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제14-08호를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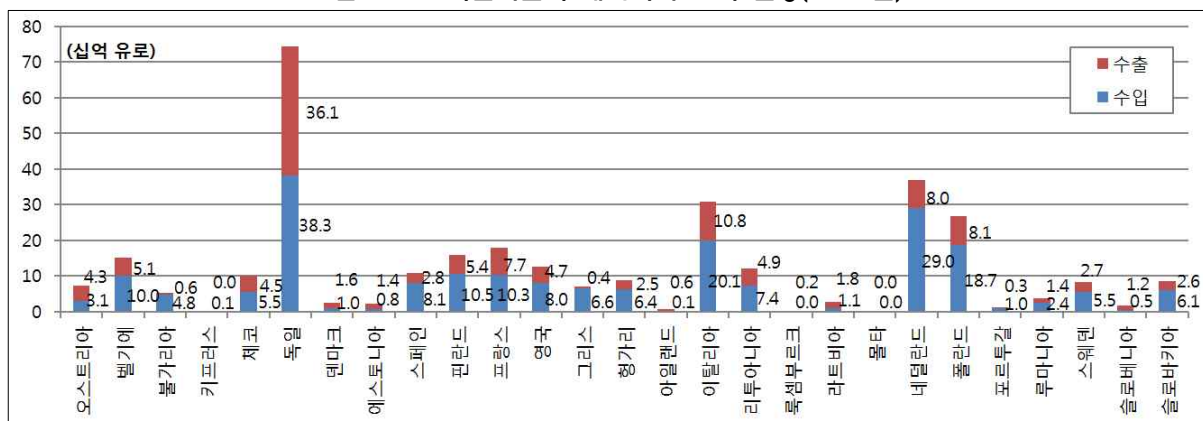
- EU의 대러시아 수출은 기계 및 운송장비가 4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화학 및 관련제품, 기타 제조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등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입에서는 원유 및 가스가 총수입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제품의 수입이 미미하게 나타남.
- EU의 대러시아 원유 및 가스(SITC 기준 03 품목) 수입은 2002년 394억 유로에서 2012년에는 1,644억 유로로 10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바 있음.
- 반면에 대러시아 수출은 같은 기간 345억 유로에서 1,234억 유로로 3배 미만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음.

표 2. 2013년 EU의 대러시아 교역품목별 분류(SITC 기준)

	수출			수입		
	규모 (백만 유로)	대러 총수출 중 비중(%)	EU 총수출 중 비중(%)	규모 (백만유로)	대러 총수입 중 비중(%)	EU 총수입 중 비중(%)
0 식품 및 육류	8,757	7.3	11.6	1,175	0.6	1.4
1 음료 및 담배	1,682	1.4	5.8	82	-	1.1
2 비식용 원재료(연료 제외)	1,742	1.5	4.3	3,663	1.8	5.4
3 광물성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1,106	0.9	0.9	160,589	77.8	32.2
4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445	0.4	9.3	441	0.2	5.1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20,153	16.8	7.4	6,266	3.0	4.0
6 재료별 제조제품	12,584	10.5	6.3	12,329	6.0	7.5
7 기계 및 운수장비	56,705	47.3	8.0	1,971	1.0	0.5
8 기타 제조제품	14,920	12.5	8.2	434	0.2	0.2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1,094	0.9	1.1	3,303	1.6	8.1
기 타	587	0.5	n.a.	16,225	7.9	n.a.
합계	119,775	100.0	6.9	206,478	100.0	12.3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4. 4),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Russia," p. 5.

그림 2. EU 회원국들의 대러시아 교역 현황(2013년)



자료: Eurostat.

- 국가별로는 독일(22.9%)에 이어 네덜란드(11.4%), 이탈리아(9.5%), 폴란드(8.2%), 프랑스(5.5%) 순으로 러시아와 상품교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대러시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2013년)
- (대러시아 수출) 수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로 일부 국가에서는 총수출 중 50% 이상을 차지하며, ‘화학물 및 관련 제품(SITC)’의 수출 비중도 높음.
- 독일의 대러시아 수출 중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의 수출은 205억 유로로 대러시아 총수출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43억 유로), 네덜란드(41억 유로), 프랑스(35억 유로), 폴란드(30억 유로) 등도 모두 기

- 계 및 운수장비(특히 차량 및 산업용 기계)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2013년).
- 이외에도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화학물 및 관련제품(SITC 5)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양국은 각각 56억 유로와 22억 유로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음.
 - (대러시아 수입) 수입 품목 중 '원유 및 가스(SITC 3)'의 수입이 가장 많은데, 네덜란드(250억 유로), 독일(233억 유로), 이탈리아(173억 유로), 폴란드(138억 유로), 프랑스(90억 유로) 순으로 나타남.
 - '원유 및 가스(SITC 3)' 수입 중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프랑스 모두 석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제품 외에도 천연 및 제조 가스 수입 또한 많음.

표 3. EU의 대러시아 2대 수출품목 및 주요 하위품목에서의 수출 현황(2013년 SITC 기준)

(단위: 백만 유로)

산업구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EU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5,646	2,191	869	1,067	1,248	20,004
54. 의약품 및 약제제품	2,101	857	204	331	241	8,320
7. 기계 및 운수장비	20,489	3,462	4,347	4,056	3,016	56,611
72. 특수산업용 기계	2,793	293	970	420	379	7,614
74.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3,826	490	1,513	413	477	10,578
77.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2,654	629	468	463	577	6,985
78. 도로주행 차량	6,670	489	553	466	713	15,647

자료: Eurostat.

표 4. EU의 대러시아 최대 수입품목 및 주요 하위품목에서의 수입 현황(2013년 SITC 기준)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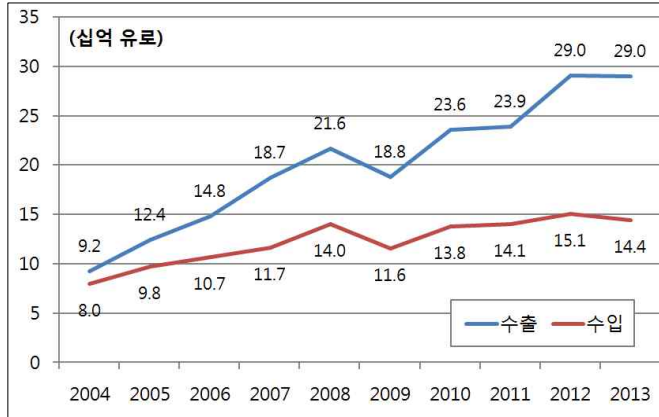
산업구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EU
3. 광물성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23,337	9,006	17,343	24,979	13,840	159,124
32. 석탄, 코크 및 연탄	558	225	338	637	470	4,619
33.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물질	22,764	8,665	9,483	24,269	12,811	135,157
34. 천연가스 및 제조가스	15	116	7,523	45	559	19,010

자료: Eurostat.

■ EU와 러시아 간 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3년 434억 유로를 기록하며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여행과 교통의 비중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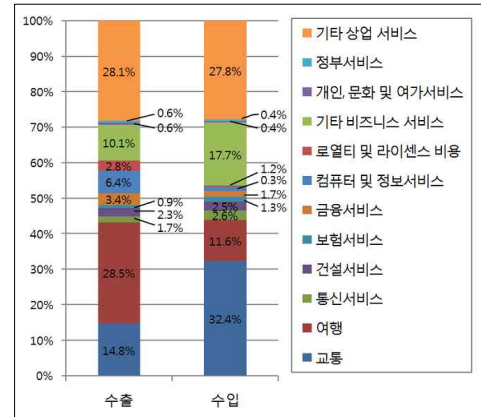
- EU·러시아 간 서비스 무역의 규모는 상품무역의 약 13.3% 수준이나 수입보다는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2004년에서 2013년 사이에 수출이 3.2배, 수입이 1.8배 증가함.
- 상품무역과는 달리 대러시아 수출이 수입보다 크며, 2004년 12억 유로에 불과했던 대러시아 서비스 무역수지는 2013년에 146억 유로까지 확대되었음.

그림 3. EU의 대러시아 서비스 교역 현황(2004~13년)



주: 2013년은 추정치임.
자료: OECD database.

그림 4. EU·러시아 서비스 교역 부문별 비중(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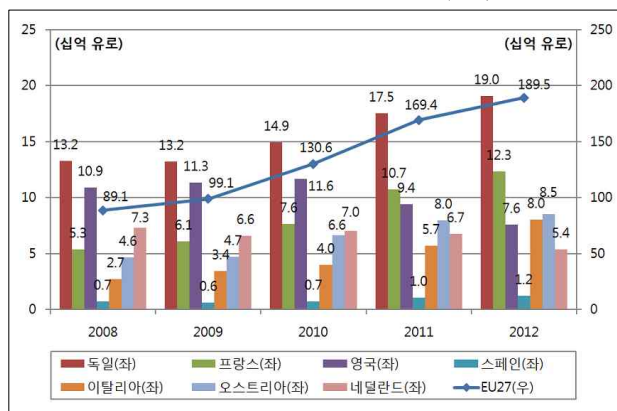
주: 2013년은 추정치임.
자료: OECD database.

나. EU·러시아 간 투자관계

■ EU와 러시아 간의 상호투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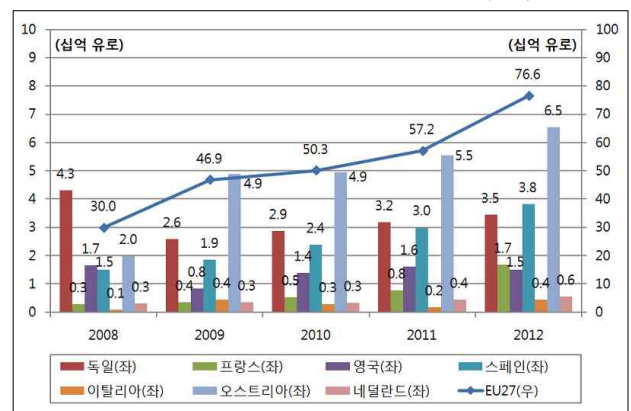
- EU의 대러시아 투자는 2008년 891억에서 2012년에는 1,895억 유로까지 증가(112.7%↑)하였으며, 러시아로부터의 투자유입도 2008년 300억 유로에서 2012년 766억 유로로 증가(155%↑)하였음.
- 회원국별 대러시아 투자의 경우 독일이 2012년 190억 유로를 투자하면서 수년간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투자유입의 경우 최근에는 독일보다 오스트리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스페인에 대한 투자유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림 5. 대러시아 투자규모(flow)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림 6. 러시아로부터의 투자유입(flow)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호간 금융 및 보험 부문의 투자비중이 현저하게 높으나, EU 회원국별로 주요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EU의 대러시아 투자(2011년)는 금융·보험 활동, 제조업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대EU 투자는 금융·보험 활동 부문이 65.6%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외 전문·과학 및 기술 활동 등의 부문에서도 이루어짐(유럽산업분류 NACE Rev.2 기준).
- 금융·보험 활동 부문에 대한 대러시아 투자는 주로 프랑스(50억 유로)와 독일(17억 유로), 네덜란드(16억 유로) 순서로 활발하게 나타나며, 제조업 투자는 독일(66억 유로), 네덜란드(46억 유로), 이탈리아(45억 유로)로 집계됨.

표 5. EU의 대러시아 투자 주요 산업부문 현황(2011년 Nace Rev.2 기준)

	EU의 대러시아 투자			러시아의 대EU 투자		
	산업구분	규모 (백만 유로)	비중 (%)	산업구분	규모 (백만 유로)	비중 (%)
1순위	K. 금융 및 보험 활동	61,513	36.3	K. 금융 및 보험 활동	37,534	65.6
2순위	C. 제조업	33,760	19.9	M. 전문, 과학 및 기술	6,438	11.3
3순위	B. 광산업	26,342	15.6	D. 전기, 가스, 증기 및 냉방 공급	3,477	6.1
4순위	J. 정보 및 통신	20,320	12.0	G. 도소매업 유통: 자동차 수리	2,494	4.4
	합 계	169,395	100.0	합 계	57,19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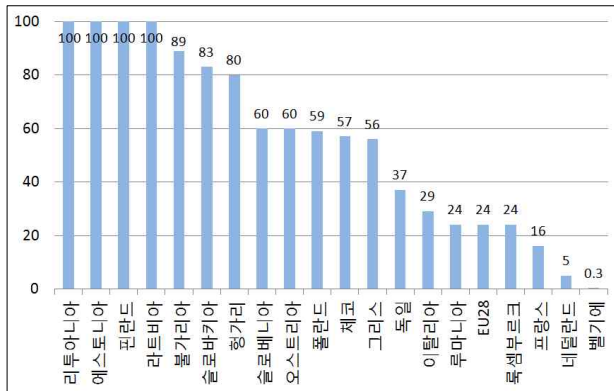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3. 경제적 손실가능성 점검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단기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될 수 있으나 양측의 경제의존도를 감안할 때 EU 경제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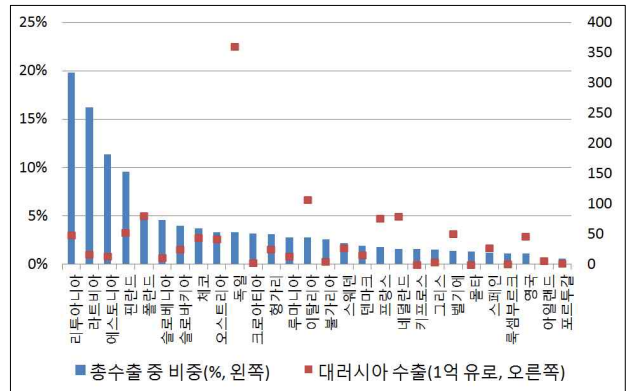
- EU 차원의 경제적 제재를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의 합의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경제적인 파장을 우려하여 경제제재에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음.
- EU는 총 가스 수요의 24%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중 절반은 우크라이나 경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 수요의 80~10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바, 영국 및 이베리아 반도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하고 있음.
- 또한 총수출(역내+역외) 중 대러시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틱 국가들은 10% 이상, 중부유럽 국가들은 3~6% 수준이며,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도 3%를 상회하고 있음.
 - ※ EU 회원국 중 대부분은 역내무역이 총 무역의 60%를 상회하므로, 역외 수출 중 대러시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수출(역내+역외)에서의 비중보다 2~3배 정도 더 높음.
- 특히 독일과 중동부 유럽 국가(CEEC)들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양자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를 표시함.

그림 7. 러시아에 대한 가스의존도(% , 2012년)



주: 국내 총 가스 소비 중 러시아산 가스의 비중
자료: Eurogas, The Economist(2014), "European Energy Security: Conscious uncoupling"(April 5).

그림 8. 대러시아 수출비중 및 수출량(2013년)



주: 총수출(역내+역외 수출) 중 비중을 의미. EU 회원국 중 대부분은 역내 교역이 총교역의 60% 이상이며, 이로 인해 역외 수출 중 대러시아 수출 비중은 훨씬 더 높음.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제재는 소급적용이 아니라 신규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천연가스가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피해는 피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 제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양측의 무역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경제제재는 2014년 8월 1일 이후로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이전 계약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나, 이중용도(dual-use)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금지, 러시아의 대EU 농산물 수입금지로 인해 EU와 러시아 간의 교역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³⁾
-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면서 대러시아 수출이 가장 많은 독일을 중심으로 ‘기계 및 운수장비’ 품목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이 제한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 2011년 계약이 체결된 프랑스의 STX Europe과 DCNS사가 제작하는 군함의 대러시아 수출 등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
- 러시아는 EU산(産) 농산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선언하였는바, EU의 대러시아 농산물 수출(총 역외 농산물 수출 중 11.6%)도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 EU가 심해 시추, 북극 원유탐사 및 생산, 셰일 원유 프로젝트 기술의 러시아 수출 금지조치를 취한바,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에 영향을 주어 EU 역내 석유 및 가스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에 대한 원유 및 가스 의존도가 EU의 전체 수입 중 30%를 상회하고 있어 러시아 측이 원유 및 가스 가격을 인상할 경우 EU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
- 다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EU가 최대 수출대상국인 만큼 수출가격 상승으로 인해 EU가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꾀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바, 에너지원에 대한 교역은 이번이 없는 한 현상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 러시아의 총수출 중 원유, 가스 등 에너지원 수출은 총수출의 70%를 차지함(EIU, 2013년).
 - ※ 러시아의 에너지원별 대EU 수출비중(총수출 중 %): 원유(88%), 가스(70%), 석탄(50%) (European Commission, 2007년 기준)

3) Dual-use 품목은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포함한 민간 및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폭발물이 아니더라도 핵무기 제조나 핵폭발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은 모두 포함됨. 자세한 품목명은 Regulation(EC) No.428/2009 참조.

■ EU 경제에 대한 손실은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조치 및 제재의 기간, 러시아의 대EU 가스 및 원유 공급 축소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임.

- EU와 러시아의 경제적 관계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2011년 EU의 대러시아 수출은 국내생산 부가가치 기준으로 1,150억 달러이며, 이는 186만 명의 고용효과를 갖고 있음.⁴⁾
 -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대러시아 수출은 EU가 미국(160.7억 달러)에 비해 7배 이상 많으며, 회원국별로는 독일(328.5억), 이탈리아(158.1억), 프랑스(95.8억), 영국(86.5억), 폴란드(82.5억) 순서로 나타남(표 6).
 - 고용의 경우 대러시아 수출과 관계된 미국의 고용이 13.2만 명인 데 반해 독일은 36.3만 명, 폴란드 30.5만 명, 이탈리아 22.1만 명 등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며, 회원국별로 국내 총고용의 0.1%에서 최대 3.3%까지 차지함.
 - 실제로 러시아는 EU를 포함하여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미국,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산(産) 식품류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발표(8월 7일)하였는데, 이로 인해 70억 달러에 달하는 EU의 대러시아 식품수출(국내생산 부가가치 기준, 표 7 참고)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
 - EU집행위원회는 러시아의 식품수입 금지조치로 인해 EU가 입게 될 손실을 120억 유로로 예상함.⁵⁾

표 6. 대러시아 총수출 중 국내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

	국내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백만 달러)	(% of GDP)	고용	국내 총고용중 비중
독일	32,845	1.0	363	0.9
미국	16,071	0.1	132	0.1
이탈리아	15,806	0.8	221	0.9
프랑스	9,576	0.4	101	0.4
영국	8,651	0.4	119	0.4
폴란드	8,248	1.8	305	1.9
스페인	4,902	0.4	71	0.4
오스트리아	3,002	0.8	31	0.7
벨기에	2,960	0.6	28	0.6
핀란드	2,910	1.3	30	1.2
리투아니아	1,404	3.7	40	3.2
에스토니아	603	3.1	21	3.3
라트비아	533	2.1	19	2.1
EU27	114,975	0.7	1863	0.8

주: World Output-Input Database (WIOD)를 활용한 계산. 2011년 자료
자료: "ING International Trade Special"(2014), p. 1. (August)

표 7. 대러시아 식품 수출 중 국내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

	국내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백만 달러)	(% of GDP)	고용	국내 총고용중 비중
폴란드	429	0.10	23	0.14
독일	1,250	0.04	21	0.05
미국	1,278	0.01	12	0.01
프랑스	869	0.03	11	0.04
스페인	626	0.05	10	0.05
이탈리아	591	0.03	9	0.04
영국	415	0.02	6	0.02
리투아니아	154	0.40	5	0.42
핀란드	273	0.12	3	0.13
벨기에	220	0.05	3	0.06
에스토니아	68	0.35	2	0.39
라트비아	52	0.20	2	0.25
오스트리아	114	0.03	2	0.04
EU27	6,697	0.04	130	0.06

주: World Output-Input Database (WIOD)를 활용한 계산. 2011년 자료
자료: "ING International Trade Special"(2014), p. 2. (August)

■ 실제로 2013년 말부터 EU 및 주요 회원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점차 감소세가 강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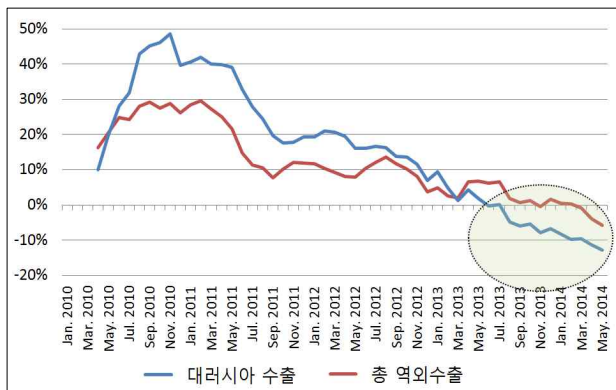
- EU의 대러시아 수출증가율은 2013년 초까지 총 역외수출의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상황이 역전되어 대러시아 수출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EU의 대러시아 수출감소가 가속화되어 2014년 2~5월의 기간 중 전년동월대비 10% 이상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감소폭(%포인트 기준)이 증가하고 있음(그림 9).
 - ※ EU의 대러시아 수출증가율(전년 동월대비): -9.4%(2014년 1월) → -11.2%(2월) → -11.0%(3월) → -13.4%(4월) → -15.6%(5월)

4) "Russian Sanctions: 13,000 European jobs at stake"(2014), *ING International Trade Special*, p. 1. (August)

5) "Russia retaliates with a ban on Western food"(2014), *Deutsche Welle*. (August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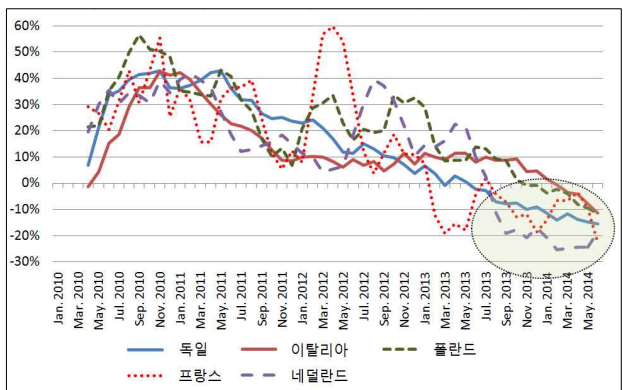
- EU 회원국 중 대러시아 수출이 많은 5개 국가의 수출추이를 살펴보면 모두 대러시아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그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 10).

그림 9. EU의 대러시아 수출과 총 역외수출의 증가율 비교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4분기 평균 이동선.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림 10. 주요 EU 회원국의 대러시아 수출 증가율 비교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4분기 평균 이동선.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현재 유럽의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EU·러시아 갈등에 따른 수출 위축이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가령 독일의 비즈니스환경지수(BCI)는 2014년 7월 전월대비 1.7%포인트 하락하면서 2013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Ifo에 따르면 러시아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독일기업들의 불안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임.⁶⁾
- 대러시아 수출 외에도 러시아와 사업연관성이 높은 에너지 기업들도 러시아 제재에 따른 피해를 볼 소지가 높음.
 - ※ 영국의 BP는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로즈네프트(Rosneft)의 지분 19.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Eni와 노르웨이의 Statoil은 로즈네프트와 북극 석유탐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로즈네프트는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포함됨.

4. 향후 전망 및 국내 기업의 대응방향

■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국내 기업의 해외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으나, 글로벌 공급사슬의 운영 측면에서 유의가 필요함.

- EU의 경제제재 중 수출금지 조치는 EU 기업 및 EU 역내생산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석유·가스 산업 관련 장비 및 부품, 이중용도 제품, 군수물자류에 한정되며, 동 제품의 대러시아 국내수출은 미미함.
-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석유·가스 산업 관련 30개 품목으로 Regulation 833/2014 Annex II에 명시되

6) Ifo Institute(2014), "Ifo Business Climate Germany: Results of the Ifo Business Survey for July 2014."

어 있는데, 주로 HS 7304~06류에 속한 시추관련 파이프, HS8413의 펌프 관련 부품 등임.

- EU가 선정한 30개 품목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러시아 수출은 2013년 8,362만 달러로 대러시아 총수출의 0.75%에 불과한바,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이중용도 제품 및 군수물자류의 경우 국내의 경우에도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의해 통제되는바, 외교적 관계 등을 감안할 때 EU 및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금지가 국내 기업에 수출증가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음.
- 반면에 국내의 EU 수출제품이 유럽 제조업체의 중간재로 사용되어 러시아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사슬의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EU에 중간재를 보급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경우 수출된 상품이 대러시아 수출에 활용되는지 점검을 통해 향후 유럽 기업의 수출 주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 또한 EU산(産) 부품을 국내에 수입·조립가공 후 러시아에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EU 및 러시아 측 업체에 이 중간재가 제재대상 품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EU와 미국은 모두 러시아 금융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시 유의가 필요함.

- EU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스위스도 러시아 금융기관을 통한 자국기업의 금융거래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은행을 통한 거래 시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함.
- EU가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5개의 러시아 국영은행은 러시아 내 자산순위 1~3위 은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은 은행 외에 가스 및 석유 생산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음.
- 스위스와 캐나다도 각각 EU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표 8. EU와 미국, 캐나다, 스위스의 대러시아 은행 및 기업 제재 현황

은행 및 기업	특징	미국	EU	캐나다	스위스
Sberbank	러시아 1위 은행(국영)	-	○		○
Bank VTB	러시아 2위 은행(국영)	○	○	○	○
Gazprombank	러시아 3위 은행(국영)	○	○	○	○
Bank of Moscow	러시아 5위 은행(국영)	○	-	○	-
Russian Agricultural Bank	러시아 국영농업은행	○	○	○	○
Vnesheconombank	러시아 국영개발은행	○	○	○	○
Novatek	러시아 1위 독립 가스생산업체	○	-	○	-
Rosneft	러시아 1위 석유생산업체(국영)	○	-	-	-

주: ○는 제재대상임을 의미함.

자료: riskadvisory.net과 언론자료, 각 제재 법안 종합.

■ 이번 사태로 인해 저탄소, 에너지 효율 경제로 이행을 추구하는 EU의 노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와 함께 선제적 적응이라는 과제를 안기게 될 것임.

- 향후 EU는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대체에너지원 확보

및 친환경산업 육성, 에너지효율 강화에 역점을 둘 것임.

- 이번 사태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러시아의 이미지가 퇴색함에 따라 사태의 악화 또는 완화여부와 상관없이 EU 및 주요 회원국들은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 독일은 과거 원유 및 가스 수급을 위해 러시아와의 유대관계 강화에 노력한 바 있으나, 이러한 정책노선에서 선회가 예상되며,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자 하는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EU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감전략인 'Resource Efficient Europe' 등의 계획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별 차원에서도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임.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비롯한 친환경산업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연구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므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함.
- EU는 친환경 분야에서 규범·표준과 기술선점을 통해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고, 교역국에 자국기업들이 이미 적용한 친환경 규제를 강요하는 통상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번 사태의 부산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파생되는 사업기회를 포착, 시장진출에 나서는 한편, 환경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동아시아 내에서 환경규제 관련 비교우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KIEP**

7) 과거 독일은 러시아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자로 인식한 바 있으며,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에너지원의 장기계약(가령 2030년까지)을 지향한 바 있음. 또한 슈뢰더 전 총리(Gerhard Schröder)는 2005년부터 러시아 최대 국영가스회사인 Gazprom의 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음.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MWI)(2008), *Report by the German Government on the Oil and Gas Market Strategy*, p. 4. (August)

부록

부표 1. EU의 고체연료 수입비중(총 역외수입 중 국가별 비중)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러시아	13.1	13.3	18.2	23.7	24.8	24.8	26.1	30.0	26.9	26.2	25.9
콜롬비아	12.1	11.8	12.1	11.7	11.5	12.7	12.3	17.4	19.9	23.6	23.7
미국	8.1	6.7	7.3	7.6	7.8	9.1	14.0	13.5	16.8	17.8	23.0
호주	16.1	16.1	14.6	13.1	11.9	13.0	11.7	7.5	10.5	8.7	7.4
남아공	30.1	29.9	25.4	25.0	23.2	20.1	16.5	15.8	9.6	7.7	6.3
인도네시아	6.6	7.0	6.7	7.2	9.3	7.8	7.3	7.0	5.5	5.0	4.6
캐나다	3.1	2.7	2.4	3.2	2.7	3.0	2.6	1.4	2.0	2.2	1.7
우크라이나	2.3	2.0	2.3	2.2	1.6	1.8	2.3	1.7	1.9	2.3	1.4
베네수엘라	1.8	2.6	1.1	1.0	0.8	1.0	1.0	0.7	0.4	0.5	0.5
기타	6.7	7.9	10.1	5.2	6.3	6.7	6.2	5.0	6.4	6.0	5.5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부표 2. EU의 원유 수입비중(총 역외수입 중 국가별 비중)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러시아	29.5	31.2	32.5	32.9	33.8	33.7	31.8	33.5	34.7	34.8	33.7
노르웨이	19.3	19.1	18.7	16.8	15.4	14.9	15.0	15.1	13.7	12.5	11.1
사우디아라비아	10.1	11.2	11.3	10.5	9.0	7.2	6.8	5.7	5.9	8.0	8.8
나이지리아	3.5	4.2	2.6	3.2	3.6	2.7	4.0	4.5	4.1	6.1	8.2
리비아	7.4	8.4	8.8	8.7	9.1	9.7	9.9	8.9	10.1	2.8	8.2
카자흐스탄	2.4	2.7	3.3	4.4	4.6	4.6	4.8	5.3	5.5	5.7	5.1
이라크	3.0	1.5	2.2	2.1	2.9	3.4	3.3	3.8	3.2	3.6	4.1
아제르바이잔	1.0	1.0	0.9	1.3	2.2	3.0	3.2	4.0	4.4	4.9	3.9
알제리	2.7	3.0	3.3	3.5	2.5	1.9	2.5	1.6	1.2	2.6	2.9
기타	21.1	17.7	16.4	16.5	16.8	18.9	18.7	17.6	17.1	19.1	14.0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부표 3. EU의 천연가스 수입비중(총 역외수입 중 국가별 비중)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러시아	45.2	44.1	43.6	40.7	39.3	38.7	37.6	33.0	29.5	31.6	32.0
노르웨이	26.1	25.5	24.3	23.8	25.9	28.1	28.4	29.4	27.5	27.4	31.3
알제리	21.1	19.8	18.0	17.6	16.3	15.3	14.7	14.2	14.0	13.0	13.5
카타르	0.9	0.7	1.4	1.5	1.8	2.2	2.3	5.5	9.7	11.0	8.4
나이지리아	2.2	3.1	3.6	3.4	4.3	4.6	4.0	2.4	4.1	4.3	3.6
리비아	0.3	0.3	0.4	1.6	2.5	3.0	2.9	2.9	2.7	0.7	1.9
트리니다드 토바고	0.2	0.0	0.0	0.2	1.2	0.8	1.7	2.2	1.4	1.0	0.9
페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8
이집트	0.0	0.0	0.0	1.6	2.5	1.7	1.7	2.1	1.3	1.2	0.6
기타	4.1	6.5	8.6	9.5	6.3	5.5	6.6	8.2	9.7	9.8	7.1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